

3. 해외 新산업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 (일본) 1995년부터 직접 지원에 의한 전략산업의 선별 육성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포괄적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접 지원의 방향으로 전환함
- (미국) 클린턴 정부는 기존의 포괄적 간접 지원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되, 기술 개발과 통상정책의 영역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함
- (시사점) 일본식 산업정책이 미국식 정책의 틀로 수렴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업정책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있음

□ 국내에서 新산업정책의 대두와 의미

- (논의의 배경) 최근 강력한 구조조정의 진행과 맞물려 이를 측면 지원할 수 있는 新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는 지난 7월에 '21세기를 대비한 新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라는 형태로 이를 표명한 바 있음
 - 新산업정책이란 ①기존과는 다른 산업정책의 새로운 형태라는 의미와 ②신규 주력 산업의 육성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모태가 되었던 일본 산업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산업정책의 모범 답안으로서 인용되고 있는 미국식 산업정책을 개관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함

□ 일본의 산업정책 변화

- (新산업정책의 추진) 1995년부터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산업정책을 추진
 - 이는 1992년 이후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고,
 - WTO 출범에 따라 산업정책에 대외적 제약요인이 발생한데 따른 것임
- (정책의 주요 내용) 新산업정책은 '기존 산업의 지원'과 '신규 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자를 강조함
 - 기존 산업 지원 : 사업혁신법, 산업입지경쟁력 강화 지원
 - 신규 산업 육성 : 창조법(創造法), 신규사업법, 15개 新산업 육성 계획
- (정책의 특징) '직접 개입과 선별 육성'이라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간접 지원과 포괄적 산업 환경 정비'라는 방향으로 전환

- 첫째, 선별된 전략산업의 육성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킴
- 둘째, 기존 산업의 지원보다는 신규 산업의 창출에 정책의 무게를 두어 산업경쟁력 강화보다 고용창출 극대화에 정책 초점을 맞춤
- 셋째, 자원의 직접 배분보다는 자원 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함. 따라서 규제 완화, 금융 개혁을 통한 산업의 애로요인 제거와 교육 개혁, 연구개발 지원, 정보화 지원 등을 통한 산업 환경의 정비가 정책의 주요 과제임

<일본 新산업정책 관련 주요 시책>

관련시책		주요내용
기존산업 육성	사업혁신법	· 생산과 고용 감소, 대내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205개 업종 대상 · 新제품, 新생산방식, 新판매방식의 개발에 중점
신규산업 육성	창조법	·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육성에 초점 · 자금조달 간접지원, 세제 지원, 기술보조금 등
	신규사업법	· 기술, 노하우, 아이디어의 상품화(벤처비즈니스) 지원 · 신규 사업용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업 리스크 공유
	15개 新산업 육성	· 정보통신, 환경, 유통 등 15개 미래 성장 분야 선정 · 자금, 기술, 인력, 정보화 측면에서 간접 지원

□ 클린턴 정부의 산업 정책

- (미국에서의 산업정책) 미국 산업정책의 양 날개는 기술개발정책과 통상정책
 -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본과 같은 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음
 - 다만 부분적으로 국방성의 주도 아래 항공우주, 반도체, 정보통신 기술이 집중 개발된 사례는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이고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진행된 것임
 - 80년대에 민주당 일부에서 일본식 산업정책의 도입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도입되지는 않았음
- (클린턴 정부의 정책) 이전의 공화당 정부와는 다른 新산업/기술을 표방
 - 신기술 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용화(기술정책), 상용화 제품의 시장 개척(통상정책)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함
 - (기술정책) 군수(軍需)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상용 기술과 민간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강조함

- (통상정책) 전략적 관리무역론의 득세 및 슈퍼 301조 강화, 국내 反독점법과 반덤핑법의 역외 적용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표-2> 미국 新기술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술개발 조직 개편	· 주도조직 : 국방성→국방성, 상무성, 민간기업 3각 체제 · 정부와 민간의 공동연구개발 파트너쉽 구축
기술개발 자금관리	· R&D자금 관리조직의 축소와 단일화 · 시급성, 경제성, 중요성에 따른 개발과제간 우선 순위 부여 · 기술개발에 대한 정치적 로비 배제
기술개발 방향 설정	· 군수부문보다 민간부문에 우위를 둔 상용기술 개발 · 정부의 기술독점 배제→보유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한 민간 부문의 활성화와 기술개발 유도 · 21세기에 대비한 정보인프라 구축

- (정책의 특징)

- 첫째, 직접 지원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통상이라는 영역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개입한다는 점. 특히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기술개발 분야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음
- 둘째, 산업정책이 궁극적으로 고용창출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창업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

□ 시사점

- 첫째, 산업정책의 형태 면에서 '선별적 직접 지원'으로 특징짓는 일본식 산업정책이 '포괄적 간접 지원'의 미국식 정책의 틀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 이는 WTO나 OECD가 부과하는 정책 제약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향후 산업정책도 새로운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 둘째, 산업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 미국의 호황이 80년대 말 이후 정책의 결과라면, 일본의 15개 新산업 육성책은 21세기를 겨냥함
- 셋째, 산업정책의 틀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여 기업과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함.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과 통상마찰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능력을 극대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함

(강 용 중 klucas@hri.co.kr ☎724-4046)